

7일 Market Index			
코스피	2564.63	코스닥	733.52
(+1.12)		(-9.79)	
금리 (미국 9년)	2.922	환율 (원·달러)	1394.35
(-0.038)		(-1.85)	

“모든 것이 제 불찰... ‘김 여사 특검’은 정치선동”

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

구체적 언급 없이 고개숙여 사과
김건희 여사 국정관여 의혹 반박
야권 특검 재발의 땀 ‘거부’ 시사
“반대진영으로부터 악마화” 고수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은 총 140여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담화 중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명태균 씨나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에는 상세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야권의 특검 공세에는 ‘정치선동’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아, 야권이 특검을 재발의해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1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29일 이후 70여일만에 기자들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준비해 온 대국민담화를 약 15분간 읽은 후, 125분에 걸쳐 총 27개의 질문을 받고, 이에 대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그간 불거졌던 의혹과 관련해 “저의 진심,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 끼쳐 드린 일도 많았다.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기자회견은 주제와 시간에 제한 없이 진행하겠다고 예고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취재진의 질문은 명태균 씨의 녹취, 이와 관련한 2022년 6·1 국회 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 대한 입장 등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국정운영 관여 등 야당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국정운영 관여에 대해

서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 먹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 명 씨 등 외부 인사와 접촉한 데 대해서도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떼면서 “대외활동이야이제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제 아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순진한 면도 있

다”고 적극 설명했다.

특히 김 여사가 지지자들의 문자에 답장을 대신 해주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인연을 딱 못 끊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본인 책임이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정치적 반대진영으로부터 ‘악마화됐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질문에서 “검찰총장을 할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했다.

이는 김 여사를 향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도를 담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어진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 특검법이 또 다시 국회에서 넘어올 경우를 문자, 야당의 공세를 ‘정치 선동’으로 규정하고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와 질답에서 여러 차례 ‘사과’, ‘제 책임’이라고 언급했지만, 어떤 것에 대해 사과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최상목 부총리

“트럼프 당선인 정책 현실화 땐 韓경제 영향 상당”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미국 선거 결과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수준의 파급력을 불러올 수 있다

는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국내의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미 대선·개표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에, 오는 8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번 선거 및 FOMC(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간 협력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의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제팀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관세인상, IRA 축소 우려 등 K-산업 불확실성 고조

트럼프시대 韓경제 격랑 예고

美 ‘對中규제’ ‘보호무역’ 심화 전망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수경 불가피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산업계 등 한국경제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만큼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물론 향후 투자 전략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관세 등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계는 향후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수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많은 변수를 계산하며 분주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3·4·6·8면〉

7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내 산업계는 반도체 지원법과 IRA 축소 또는 폐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과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을 비판해 온 만큼 관련 법에 따른 정책 추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산업은 대중국 규제를 비롯해 보호무역주의가 더 심화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지원법)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자동차·2차전지 산업은 완성차 수출 관세 인상 및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 등 영향으로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AMPC(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조항도 축소될 경우 한국 자동차 및 이차전지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역시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친환경을 빙자한 사기(Green New Scam)’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관세 도입도 우리 기업의 부담으로 작

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20%까지 인상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1기 재임 때에도 철광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시름 중인 철강업계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장벽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미국이 한국 관세를 인상할 경우 미국 수출이 줄어들 것이고,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관세를 인상은 경우에도 글로벌 경기가 위축돼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윤, 트럼프와 당선 축하 통화...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 한동훈 “이재명 1심 재판 생중계해야...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 /사진 뉴시스

▲ 김상훈 “당정,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추진... 정기국회 처리” /사진 뉴시스
▲ 박찬대 “윤, ‘박절·인정’ 괴변으로 국민 심판 피할 수 없어”



▲ 조국, 트럼프 재선에 “대북문제 물꼬 트는 계기 활용해야”
▲ 명태균 “강경경 2000만원 요구... 녹취로 상처 입은 분들께 사죄” /사진 뉴시스